

北 지뢰 두고 정동영 “고의성 미확인” vs 野 “책임 물어야”

〈통일부 장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

북한 고의성·책임 추궁 문제 쟁점
영화 암살자(들) 역사왜곡 논란에
장관 “관객이 판단할 일” 선그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DMZ(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북한의 ‘고의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정 장관은 이날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불의의 사고’ 혹은 ‘북한의 도발’인지 묻는 박종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그 의도에 대해서 최종 발표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지뢰 폭발 사고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김여정(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심기를 살펴야”라며 “우리 군 장병이 발목을 잃었는데, 지뢰 지대에 청년 장병이 또 들어가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아마 유엔군사령부도 그 의도에 대해서 확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막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근본적인 해법은 남북의 적대와 증오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의) 증오와 적대를 끝내야 한다”며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에 100~200년이 걸린다고 한다. 좋은 정치란 증오와 적대를 부추기는 정치가 아니라 갈등과 적대를 화해화 협력으로 바꿀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방부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해 놓은 지뢰를 폭

파 방식으로 제거한 것을 “머저리 같은 대응”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앞마당에 와서 똥을 싸놓고 갔는데, (북한군이) 안 치우면 우리가 치울 것이라고 하는 것이 머저리 같은 대응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 장관은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 병사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왜 위험한 작전에 우리 장병들을 투입하나. 그걸 우리가 왜 하나”라며 “누가 또 다칠 수

도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정 장관이 지뢰 폭발 사고에 북한의 고의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북한이 심어놓은 지뢰라는 물건에 대한민국 국민을 살상하는 것 외에 목적이 있나”라며 “지뢰라는 물건 자체에 고의성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지뢰가) 고라니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군을 살상하려는 것인데 고의가 없다는 것이 위험한 말 아닌가”라고 따졌다.

한 의원은 “북한이 (군사분계선에 심어놓은) 지뢰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거해야 하지만, 그 지뢰를 심어서 우리 군을 공격하고 상해를 가한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이 빠져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김여정 총무부장이 어제 바로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고 말했다. 사고 요구를 거부한 것인데 그다음 조치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정 장관은 “(남북의) 서로 주장이 다르다”고 답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장에선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왜곡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역사적 사건을 영화화할 때 창작의 자

유를 무제한으로 허용해야 하느냐. 역사 왜곡을 금지하기 위한 한계가 필요하지 않냐”고 질의했으나 최취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상상력과 창작에는 제약이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을 다루며 정권 내부의 자작극 가능성을 제기한 영화를 ‘영화적 상상력’으로 받아들이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과 관객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사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부연했다.

최 장관이 영화 출연 배우의 집 앞에서 벌어지는 보수 단체의 시위를 두고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글을 쓴 것을 윤 의원이 지적하자 최 장관은 “창작의 결과물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 문제부 장관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냐”며 “더 큰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방 조치, 안전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선관위 국감 ‘못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전 세계 웃음거리 전락” 여야 질타
선관위 “전면적인 쇄신 방안 마련”

여야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 ‘눈 가리고 아웅’ ‘전 세계 웃음거리 전락’ 등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위철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단순한 일회성 과오가 아닌 선거관리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 관리의 근본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행안위는 이날 선관위, 인사혁신처, 소방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동완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에 대해 “올림픽공원이 무법천지가 된 지 며칠째인지 알고 있나. 124일째”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선관위) 특검 쪽에 선관위가 올림픽공원 재검표에 대해 요청한 사항이 있느냐”고 물었다. 강 대행은 이에 “저희들이 직접 요청하지 않았다. 특검 쪽에서 협조를 구했다”고 답했고, 윤 의원은 “왜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서 (올림픽공원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행(왼쪽)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진 위원장에게 선사문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을) 극우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걸 그냥 두고 보느냐”고 비판했다.

박상용 국민의힘 의원은 “6·3 지방선거의 선관위 업무와 관련한 대혼란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면서 선관위의 분명한 대책을 요구했다.

같은당 권영진 의원은 선관위 채용비리 수사 대상 직원들의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한 변호사 비용 보전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위철한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선거관리의 신뢰를 훼손한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지금 마주

한 위기는 그동안 누적돼 온 해묵은 관행과 안이한 태도가 빚어낸 결과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위 직무대행은 “우리 위원회는 빠저린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조직개편, 투·개표 절차 개선, 정치관계법 개정세 분야로 나누어서 전면적인 쇄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의 경험과 시각에만 갇히지 않고 국회는 물론 외부 전문가와 학계의 비판적인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서 쇄신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

李, 재일동포 초청해 “한일관계 새로운 장”

민단 창단 80주년 축하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재일동포 단체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을 만나 한일관계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며 재일동포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단 창단 80주년을 기념해 재일동포를 청와대로 초청하고 한

신과 공로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1946년 창단한 민단은 지난 80년간 재일동포사회의 구심점으로 동포들의 권익을 지키고 우리말과 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하며 한일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해 왔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는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며 일본에서 힘을 보태주신 재일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선대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다”고 격려했다.

이어 “민단은 일본사회에서 재일동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계신다”며 “오랜 세월 여러 어려움과 차별에 맞서 동포들의 권익을 지켜왔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어려움이 있을 때면 양국 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훌륭하게 잘해주셨다. 대한민국은 그 역사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김지용 중수청장 청문회 14일 ‘가닥’

여당 내 반대 분위기 소강상태
김민석 “이제 청문회서 다룰 때”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잠정적으로 확정되면서, 여당 내 반대 분위기가 어느 정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전날(6일)에 이어 당 강경파를 겨냥해 “개별적 의사 표현이 충분히 됐으면 인사청문회를 통해 다루는 게 좋다”면서 당내 메시지 단속에 나섰다.

중수청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계획서 채택을 논의한다. 다만 이날 행안위에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있었다. 이날 행안위에서 인사청문계획서가 채택되면 민주당이 밝힌 대로 오는 14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후 민주당 일각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일각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강한 반대 여론이 불거졌다.

진영 내 반발이 계속되자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추가 검증을 거쳤다. 청와대는 추가 검증 결과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기회를 받지 못할 정도로 결격사유가 있지는 않다는 입장을 냈고, 지난 2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제출됐다.

당내 강경파는 여전히 반발 중이다. 법사위원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광복이후반 민특위를 만들었는데 친일파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했고, 추미애 경기지사는 “검찰 개혁이 드디어 9부 능선을 넘어라 기대한 때에 도리어 등 뒤에서 다시 총알이 날아와 이런 것을 구구절절 되짚어야 하는 날이 오리라는 것

을 상상조차 못했다”고 비난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황현선 최고위원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국회 청문회의 가이드라인이 되서는 안 된다”며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인사권 침해나 사심, 극단주의로 몰아세워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당내 강경파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연이어 냈다. 김 대표는 전날 당 공식 유튜브채널 ‘민주당 티비’에서 “과한 어떤 요구나 주장으로 과거처럼 전체 개혁의 진영과 대열과 전선과 대통령의 리더십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 당에서 조금 제어를 할 때도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인사권’까지 언급한 상황에서, 강경파가 계속 개별적인 메시지를 낼 경우 당 차원의 조치를 내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또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민티’에서도 “중수청장 이슈도 인사청문회라는 제도를 통해 다룰 수 있다”며 “개별적 의사 표현이 충분히 됐으면 인사청문회를 통해 다루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6일) 제가 ‘당에서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제어할 때가 됐다’는 얘기를 했다”면서 “이미 충분히 의사 표명을 하셔서 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하실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다양한 의견의 시간은 지나고 중수청장에 대해 인사청문회의 시간이 왔다”며 “청문회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문위원회에 전하고 당은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도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 소상히, 성실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했다.

이제는 장외공방이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히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전날 공개적으로 경고한 만큼, 다시 한 번 단속에 나선 셈이다.

/서예진 기자